

2021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21년 4월 24일



국회직 8급 행정학

1. 출제영역분석

총론	6	재무행정론	4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4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2	지방자치론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2	기출변형 문제	2	신유형 문제	1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짝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2	2	1	7	-	5	8

01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을 감한다.
- ③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 ⑤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 【해설】 ① [O]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경한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정지된다.
- ② [X]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 ③ [O]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이다.
- ④ [O] 해임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제한은 없으나 뇌물·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제한된다(5년 미만 : 퇴직급여의 1/8 감액, 5년 이상 : 퇴직급여의 1/4 감액).
- ⑤ [O]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또한 일부 삭감되는 처분이다(5년 미만 : 퇴직급여의 1/4 감액, 5년 이상 : 퇴직급여의 1/2 감액)

▶ 올바른 지문

- ②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summary | 징계의 종류

① 신분보유

구 분	승급제한	보수(기간)	직무수행	기 타
견 책	6개월	영향 ×	영향 ×	훈계 · 회개
감 봉	12개월	1/3(1~3개월)	영향 ×	
정 직	18개월	전액(1~3개월)	1~3개월 정지	
강 등	18개월	전액(3개월)	3개월 정지	1계급 강등

② 신분박탈

구 분	처 분	공직취임제한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한 범위
해 임	강제 퇴직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 × (금전문제 해임시 제한 ○)	5년 미만 : 1/8 5년 이상 : 1/4
파 면	강제 퇴직	5년간	제한 ○	5년 미만 : 1/4 5년 이상 : 1/2

0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부세의 재원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포함된다.
- ②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통합·일원화되었다.
-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해설】 ① [O]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② [X]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이다.
- ③ [X]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④ [X] 특별교부세의 교부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⑤ [X]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올바른 지문

- ②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 ③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20년 100분의 45로 상향조정되었다.
- ④ 특별교부세는 그 교부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⑤ 국고보조금은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883~888

▶ ①

03 다음 사례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방정부 A시는 최근 일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청년소득 정책을 실시하였다. 청년소득 지급이 청년들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소득 정책 실시 전후 대상자들의 고용현황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를 청년소득의 효과라고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경기불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호손효과
- ② 검사요인
- ③ 역사적 요인
- ④ 회귀인공요인
- ⑤ 오염효과

【해설】 ③ [O] 보기의 사례는 실험기간 중 일어난 사건에 의한 대상집단의 특성이 변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역사적 요인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summary | 내적 타당도의 저해요인

선발요소 (선정요인)	• 조사자가 자의로 실험집단을 배정하거나 지원자를 신청 받아 실험집단을 구성할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등하게 선발되지 못하여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져 발생하는 현상
역사적 요소 (사건효과)	•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발생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버스전용차선제 정책의 시행 전·후를 평가하려는데 두 시점 사이 지하철이 개통
성숙효과 (성장효과)	• 시간 경과에 따라 실험집단 특성이 자연스럽게 성장·발전하는 것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복지서비스 제공 후 건강상태를 측정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선발과정에도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
상실요소 (피실험자 상실)	• 연구기간 중 실험집단의 일부가 탈락해 남아 있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
처치(처리)와 상실의 상호작용	• 실험처리기간 동안에 구성원의 상실로 실험의 내적 타당성이 위협받는 현상 • 두 집단 간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두 집단들에 대한 다른 처치로 인하여 처치기간 동안에 두 집단으로부터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되어 결론이 왜곡되는 현상
측정(검사)요소 (시험요소)	• 측정 그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동일한 시험문제를 사전·사후에 사용하게 되면 사후 시험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
측정수단요소 (도구요인)	• 정책집행 전과 후에 측정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왜곡되는 현상 • 측정도구의 일관성 문제로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됨.
회귀인공요소 (회귀요인, 통계적 회귀, 실험직전반응)	•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평균값)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 영어점수 최하위 20%의 연수원생들에게 특강을 실시하여 효과를 평가
오염효과	•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오염 또는 확산 효과로서 모방, 정책의 누출(이전), 부자연스러운 변이 등이 여기에 포함됨.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 ②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 ③ 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해설】 ① [○] 다중합리성 모형(Thumaier & Willoughby)은 예산과정이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된다는 예산이론은 현대 예산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과정의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따라서 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예산주의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 ② [×] 단절균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45~650

▶ ①

0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행정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T기술의 발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운영된다.
- ② 대규모 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③ 정보 및 분석기술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다.
-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간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⑤ 행정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한다.

【해설】 ①, ②, ③, ⑤ [O]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산업적 변화를 넘어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예측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운영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를 둘러싼 민간과의 관계 설정 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다. 실시간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과거 관료중심의 폐쇄적 업무방식에서 개방적 업무 방식으로 변화, 온라인상의 국민의 공적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구축됨으로써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현실 정책결정과정에 구현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④ [X]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직접(간접 X)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올바른 지문

④ 정보의 공개와 유통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731

▶ ④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③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장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 ⑤ 충청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① [X]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② [X]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③ [X] 육군 소장은 재산공개의무가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X] 교직원의 외부장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 : 10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⑤ [O] 충청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교육장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올바른 지문

- ①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③ 육군 중장과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562~567, 581~584

▶ ⑤

0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 ② 공공기관심의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④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 아니한다.
-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서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해설】 ①, ③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X]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④ [O]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결정되지는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O]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지표로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혁신과 소통 등이 포함된다.

▶ 올바른 지문

②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② 후기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한다.
- ③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제시한 리그스(Riggs)의 연구는 행정 현상을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④ 신제도론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혹은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중시한다.

- 【해설】
- ① [O] 공공선택론은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O]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중립적 과학적 연구보다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하며, 정책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③ [O] 1950년대 가우스(Gaus), 리그스(Riggs) 등을 중심으로 행정연구에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리그스(Riggs)는 비교행정 연구모형을 통해 후진국 행정 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환경변수로서 경제적 기초, 사회구조, 이념적 요인, 통신 및 정치 체제 등 다섯 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환경 요소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행정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설명하였다.
 - ④ [O] 신제도론은 구제도론과 달리 제도를 비공식적·규범·규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제도와 환경과의 교호작용을 중시하였다.
 - ⑤ [X] 체제론은 행정 현상에서 중요한 요소인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 올바른 지문

- 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의 문제와 행정의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25, 132, 139, 146~147

▶ ⑤

09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사무위탁
- ㄴ. 행정협의회
- ㄷ. 지방자치단체 조합
- ㄹ. 연합
- ㅁ. 합병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해설】 ㄱ [X]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지는 않는다.
 ㄴ [X] 행정협의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락·조정·협의 등을 통한 광역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다.
 ㄷ [O]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ㄹ [X]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독립적인 법인격은 그대로 가지면서, 그 전역에 걸친 '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ㅁ [O] 합병(통합)방식은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잡다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923~925, 928

▶ ④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책임운영기관 - 국립의료원
- ㄴ.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 ㄹ. 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 ㅁ. 정부기업 - 우정사업본부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 【해설】 ㄴ [×] 한국관광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ㄷ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ㄹ [×]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올바른 지문

- 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관광공사
- ㄷ.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 ㄹ.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87, 390, 393

▶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는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비현실적이거나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 ② 일선관료는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③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는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다.
-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 ⑤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 【해설】 ① [O] 일선관료들의 집행성과에 대한 기대 중 일부분은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 ② [O] 일선관료들이 다른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일선관료들은 비록 계층제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지만, 집행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광범위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③ [O] 일선관료들은 육체적·신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공격자’(potential assailants)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킨다. 예를 들어, 경찰들은 옷차림, 인종, 전과경력 등을 기준으로 자신들에 대한 신체적 위협자를 정의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간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회피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협요인을 줄이기도 한다.
- ④ [X] 시간과 정보의 부족, 기술적인 지원의 부족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자원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즉흥적인(improvisational) 집행과 피상적인 집행을 낳는다.**
- ⑤ [O] 일선관료들이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shortcut)을 택하는 것이다. 즉, 재빨리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대상 집단과의 갈등,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급법원 판사들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필요한 증언과 피의자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심리를 하고, 경찰들의 단속은 간헐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올바른 지문

- ④ 일선관료는 시간과 정보·기술적인 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12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톰슨(Thomson)의 이론에 따르면, (㉠)의 경우 단위부서들 사이의 과업은 관련성이 거의 없으며 각 부서는 조직의 공동목표에 독립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이러한 (㉠)은 주로 중개형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부서들이 과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위작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있는 경우 부서간 의사소통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리자들은 부서간 조정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① 교호적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
- ② 연속적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
- ③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
- ④ 과업의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 ⑤ 공동의 상호의존성(common interdependence)

【해설】 ③ [O] 집합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이다. 집합적 상호의존성(중개적 기술)은 상호의존상태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활동에 쓰이는 기술로 부서들 사이의 과업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집합적(pooled) 상호의존관계에서 발생한다.

summary | 기술분류와 조직구조(Thompson)

기술	상호의존성	의사전달의 빈도	조정형태
중개적 기술	집합적 상호의존성	낮음	규칙, 표준화
연계형 기술	연속적 상호의존성	중간	정기적 회의, 수직적 의사전달, 계획
집약적 기술	교호적 상호의존성	높음	부정기적 회의, 상호 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예정표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44

▶ ③

13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수행자가 복잡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방식을 법규나 지침으로 경직화시키지 않는다.
-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동질성이 높다.
- ③ 수평적 분화의 정도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낮다.
- ④ 테스크포스는 특수한 과업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본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협력업체들은 하위조직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조직들이다.

- 【해설】 ① [O]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조직 내의 구조적 배열뿐 아니라 조직자체도 필요에 따라 생성·변동·소멸되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 ② [X], ③ [O]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전문성이 매우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횡적인 분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업무수행이 자율적 책임 하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시·감독의 필요성은 낮아 종적인 분화는 높지 않다.
- ④ [O]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문제에 관련된 부서들의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이다.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일시적 문제에 대한 부서 간 직접 조정장치로서 수직적 계층의 정보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조정기제이며, 일시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해산한다.
- ⑤ [O] 네트워크 조직은 전략, 계획, 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 올바른 지문

- ② 전문성이 강한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성이 높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53, 358, 366, 372

▶ ②

14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해설】 ① [O]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제도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O]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③ [O]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④ [O] 주민소송은 재무행위와 관련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 제기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받지 않은 주민도 제기가 가능하다.

⑤ [X]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었으나,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는 재량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5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①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 ②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 ③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 ④ 굳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 ⑤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해설】 ① [O]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동원형은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부의제화를 만드는 경우이다. 주로 정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지만, 일방적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 PR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가 진행되며, 주로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summary | 외부주도형 vs 동원모형 vs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 내부주도형, 음모형)
전개방향	① 사회문제 ⇨ ② 사회적 이슈 ⇨ ③ 공중의제 ⇨ ④ 정부의제	① 사회문제 ⇨ ② 정부의제 ⇨ ③ 공중의제	① 사회문제 ⇨ ② 정부의제
주도세력	외부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의제화가 진행	정부 내의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최고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	동원형과 같이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최고통치자보다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가 주도)
특징	• Hirshman ⇨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함.	•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여 의제를 설정. 의제설정이 비교적 용이함 • 전문가의 영향력이 큼.	• 정부관료제 내부에서만 정책의제화의 움직임이 있음. 공중의제화가 생략(행정PR ×)
사회·문화적 배경	•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발생	• 정부부문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발생	• 권력집중형 국가(불평등 사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시간이 급박한 경우,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한 경우에 발생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218~219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국가재정법 제57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③ [O]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4월 20일 X)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O] 국가재정법 제60조

동법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33, 679~680

▶ ④

17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공무원이 반응해야 하는 대상을 고객과 유권자 집단으로 본다.
- ㄴ.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 ㄷ. 행정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공익의 개념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ㅁ.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 【해설】 ㄱ [X] 전통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책임 창출을 공익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 ㄴ [X], ㄹ [O]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보는 반면, 신공공관리론은 개인 이익의 총합이라고 본다.
- ㅁ [X]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무원의 동기유발수단은 사회봉사, 사회이익에 기여하려는 욕구**이다.

summary | 전통 행정이론 vs 신공공관리론 vs 신공공서비스론

구 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및 인식토대	• 초기 사회과학이론	• 신고전파 경제이론, 성과관리론	•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복합적
합리성과 인간행태	• 개괄적 합리성 •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 경제인	• 전략적 합리성 •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 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 이익의 총합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정부역할	• 노릇기(정치적으로 정의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둔 정책설계와 집행)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집단이익의 협상과 중재)
책임성 확보	• 위계적	• 시장지향적	• 다면적
행정재량	•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 허용	• 목표달성을 위한 폭넓은 재량	•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조직구조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	• 분권화된 조직	• 리더십이 공유되는 협동적 조직
동기유발	•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정신	• 사회봉사, 사회이익에 기여하려는 욕구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180~182



18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 ③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O]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O] 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페이고(Pay-go)	“Pay-as-you-go”의 약어로서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그냥 통할 수는 없다” 는 뜻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

③ [O] 국회법 제63조의2

국회법 제63조2 【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X]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 등을 심사하는 체계·자구의 심사는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⑤ [O] 헌법 제53조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올바른 지문

④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참고】

▶ ④

19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보기>

- ㄱ.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 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 ㄷ.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ㄹ.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 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해설】 ① [O]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공모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ㄴ [X] 개방형직위는 일반직 뿐만 아니라, 특정직, 별정직도 해당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X] 소속장관(중앙정부부처의 장)은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인사혁신처장(중앙인사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용권자)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려면 해당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중앙인사기관장 협의 X)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 직위】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ㄹ [O]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등 채용 및 승진, 전직에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ㅁ [X] 개방형직위의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년(3년 X)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493~496

▶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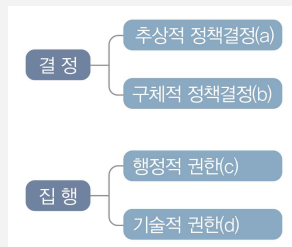
-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②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 ③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을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결정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해설】 ⑤ [×]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지배(광범위한 재량 ×)하는 유형이다.

▶ 올바른 지문

- ⑤ **재량적 실험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summary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구 분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자
고전적 기술관료형	a+b+c	d (미약한 재량권)
지시적 위임가형	a+b	c+d (충분한 재량권)
협상형	결정자가 목표설정 후 집행자와 목표와 수단 협상	
재량적 실험형	a	b+c+d (광범위한 재량권)
관료적 기업가형	× (형식적 결정권)	a+b+c+d (정책과정 지배)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 [O]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나 정보화·연구개발사업 등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 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 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X]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각 주무관청(기획재정부 장관 X) 이 지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8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 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 이라 한 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③ [O]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O]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기관사업 가운데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토목사업 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대상 이된다.

⑤ [O]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한 예산낭비신 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2 혼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系)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 ㄴ. 혼돈이론에 의하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 ㄷ. 혼돈이론은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뉴턴(Newton)의 운동법칙을 계승한 것이다.
- ㄹ.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 조직화(self-organizing)와 공진화(coevolution)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해설】 ㄱ [O] 혼돈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거나 간단한 규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대혼돈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연구하는 혼돈이론은 안정된 운동상태를 보이는 계(界)가 어떻게 혼돈상태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또 혼돈상태에서 숨겨진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 ㄴ [O]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초기조건의 차이가 점차 증폭되어 시간이 얼마간 지나면 완전히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 ㄷ [X] 혼돈이론은 비선형적 (nonlinear) 변화를 가정한다. Newton은 자연현상을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예측가능하고 질서정연한 것으로 보았지만, 혼돈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전개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정한다.
- ㄹ [O] 혼돈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 공진화(coevolution)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자기조직화 (self-organizing)	비선형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물 또는 현상들이 자기 스스로 구조와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것
공진화 (coevolution)	계(界)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79

▶ ③

2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중단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 ㄴ.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환경의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다가 외부의 충격을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경로에서 다시 균형상태를 이루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 ㄷ.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조되고,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규칙 또는 규범에 적절하게 순응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 ㄹ.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ㄱ [X]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중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에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중단면적 측면	횡단면적 측면
국가 간 차이를 설명	조직 간 유사성 설명

- ㄴ [O]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단절적 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 ㄷ [O]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현대 조직의 많은 제도와 절차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관행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새로운 제도로 정착된다고 설명한다.
- ㄹ [O]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자체에 이미 인간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가 내재(배태)되어 있어 그들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없으며 제도에 종속될 뿐이라고 본다.

▶ 올바른 지문

- ㄱ.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중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에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 또는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참고】 2021 신용한 신용한 행정학 p.149~151

▶ ④

24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 ㄴ. 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 ㄷ.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ㄹ.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ㄱ [O] 총액예산예산제도(총괄예산제도)는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예산제도로,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ㄴ [X]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지만, **계속비는 예산의 일부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필요로 한다.**
- ㄷ [O] 국가재정법 제22조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ㄹ [X] 국고채무부담위란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안의 것 외에 정부가 재원확보 없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 등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차관, 국공채 등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606~607, 673

▶ ②

2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해설】 ① [X] 성과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관리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 ② [O] 수단(투입)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 ③ [O]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성격을 가진다.
- ④ [O]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 ⑤ [O]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성과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summary | 규제의 대상별 분류

수단규제 (투입규제)	•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함.
성과규제 (산출규제)	• 정부가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관리규제 (과정규제)	• 과정을 규제하는 것.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 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행을 요구 • 수단규제에 비해 자율성이 높음. 성과 달성 정도를 정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함.

【참고】 2021 신용한 행정학 p.31~32

▶ ④